

조선문화재 반환문제에서 바라보는 한일관계 -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

나가사와 유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방문학자)

한일관계에서 조선문화재 반환문제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 방문학자인 나가사와 유코 선생님의 이번 강연은 조선문화재 반환문제를 통해 한일관계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조선문화재 반환문제의 역사는 짧지 않다. 그러나 한일관계에서 조선문화재 반환은 여타 문제와 달리 크게 주목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일본정부와 국민은 문화재 반환문제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회피하는 태도로 여겨졌었다. 나가사와 선생님은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의구심에서 조선문화재 반환문제를 연구하고자 했으며 한일회담을 비롯한 공개자료를 통해 한일관계의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 연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일관계에서 문화재 반환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성이 강한 의제였다. 본격적으로 조선문화재 반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한일회담부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한일회담에 앞선 예비회담에서 이미 한국은 조선문화재의 반환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한 일본정부는 청구권교섭과는 별개로 조선문화재의 조기 양도 방침을 세우게 된다. 한편, 회담초기에 한국정부는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여타 요구 사항과 다른 해결법을 제시한다. 즉, 일본 측의 자주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은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 불법 반출에 대한 책임론적 접근보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인 접근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외무성 역시, 문화재반환을 하나의 외교적 카드로 보고 있었다.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문제는 문화재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었다. 문화재 문제를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청구권 문제와 분리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정치적인 해결법을 우선하게 된다. 일본측이 내세운 논거는 국제법상 문화재는 반환의 의무도 권리도 없다는 점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지역으로서 평화적인 점유가 행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있었던 조선왕실의궤 반환 시에도 일본의 외무대신은 '반환(返還)'이 아닌 '인도(引渡し)'이며 청구권 문제와는 별개의 것임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한일회담 당시의 방침이 바로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화재 반환에 관한 1952년 청구권 위원회 협의부터 1965년 타협을 통해 협정에 조인하기까지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추적한 나가사와 선생님의 이번 강연은 한일회담 합의 후 조속한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일본 국내의 반대가 심해서도 한일 양국이 합의가 미진해서도 아닌 그 근본에 정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문 : 1965년에 반환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 양도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일본현지에 조선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남아있고 어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답 : 일본정부가 조선문화재의 수와 가치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600페이지에 달하는 리스트와 소장인 기록을 바탕으로 추측하면 상당한 수의 문화재가 남아있을 것. 또한, 남아있는 기록도 문화재를 표기법이 한 점 한 점을 개별 표기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 나온 문화재 몇 종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많은 수의 문화재가 남아있을 것이다.

문 : 한일 양국 정부는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문화재의 수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답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파악할 수 없었다.

문 : 북한에서 가져 온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답 :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된 문화재 반환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반환 당시,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국회에서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북한 문화재는 관련 없다고 결론. 앞으로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맺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 : 반환할 문화재를 일본 반입 1905년 이후의 것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1905년이라는 시기의 설정은 회담 전체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일본은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1905년을 주장했고 한국은 이 것을 거부하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년도를 말하지 않고 놔두는 편이 임진왜란 당시 반입된 문화재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좋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 일본의 서지학연구가에 따르면 임진왜란 전후 일본의 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것은 당시 승려 등을 통해 조선의 책이 대거 유입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반입된 조선 문화재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문 : 일본인 연구자로서 조선문화재 반환 문제를 연구면서 느끼는 소감과 일본 내 반응은 어떠한가?

답 : 한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이번 반환 (조선왕실의궤 등)에서도 보여지듯이 청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더욱 양국간에 어떠한 협정을 체결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의 것을 모두 청산한다고 말하면서도 청산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